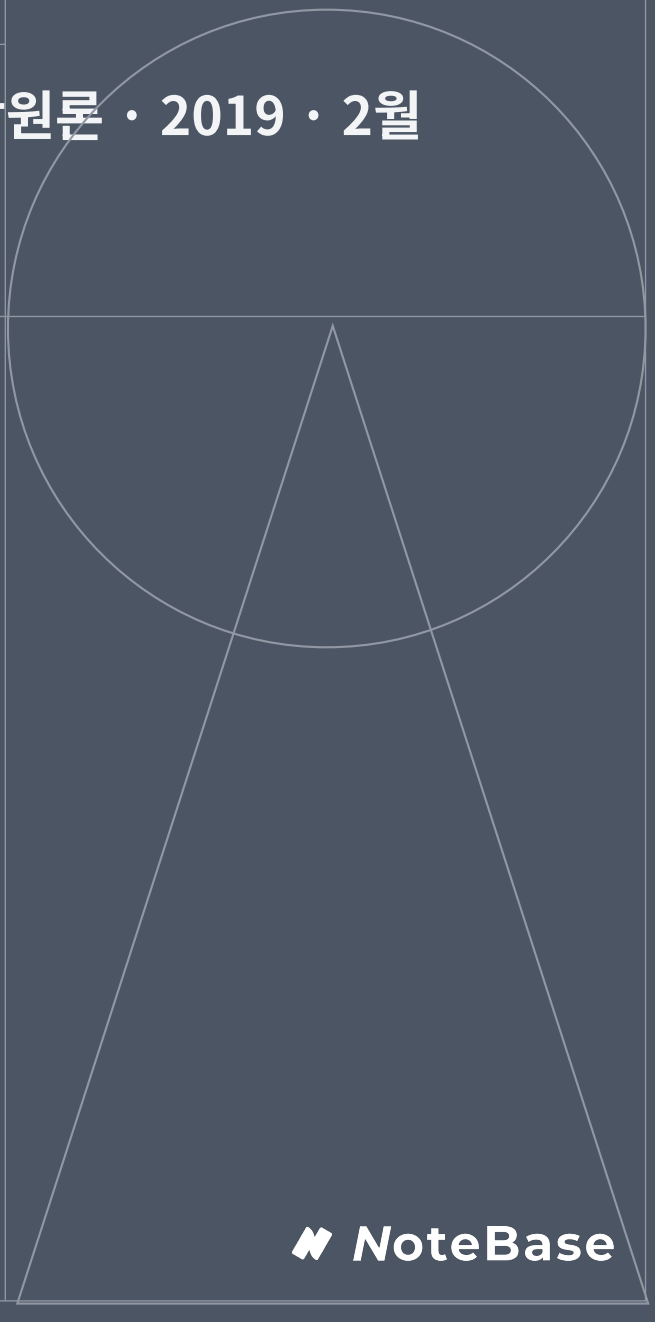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경제학원론 · 2019 · 2월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경제학원론 · 2019 · 2월

공무원/서울시/7급 · 경제학원론 · 2019 · 2월

문 1. 자산가격이 그 자산의 가치에 관한 모든 공개된 정보를 반영한다는 이론은?

① 효율적 시장 가설

② 공개정보 가설

③ 자산시장 가설

④ 위험프리미엄 가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자산가격의 정보 반영성을 설명하는 효율적 시장 가설과 다른 비표준 용어 또는 별개 개념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효율적 시장 가설: 자산가격은 이용 가능한 정보를 신속하게 반영한다는 이론이다. 공개된 정보를 반영한다는 설명은 그중 준강형 효율성의 내용이다.
공개정보 가설: 자산가격이 공개정보를 반영한다는 뜻으로 쓰일 수는 있으나, 정식 이론명으로 쓰이는 표준 용어는 아니다.
자산시장 가설: 자산시장의 존재를 가리키는 일반적 표현에 가깝고, 정보 반영성을 설명하는 특정 이론명은 아니다.
위험프리미엄 가설: 위험이 큰 자산일수록 더 높은 기대수익률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설명으로, 정보의 반영 범위와는 다른 논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효율적 시장 가설은 자산가격이 이용 가능한 정보를 반영한다는 이론이므로 맞다. 문제의 문구인 '모든 공개된 정보'는 특히 준강형 효율적 시장 가설의 설명에 해당하므로, 보기 중 가장 정확한 이론명은 효율적 시장 가설이다.
② X: 틀린 부분은 '공개정보 가설'이라는 표현이다. 공개정보를 반영한다는 내용 자체는 맞지만, 이를 독립된 표준 이론명으로 부르지는 않는다. 올바르게는 효율적 시장 가설의 준강형이 공개정보 반영을 설명한다.
③ X: 틀린 부분은 '자산시장 가설'이라는 표현이다. 이는 정보가 가격에 반영되는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정식 이론명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자산가격의 정보 반영성을 묻는 이론은 효율적 시장 가설이다.
④ X: 틀린 부분은 '위험프리미엄'을 정보 반영 이론과 연결한 점이다. 위험프리미엄은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 기대수익률이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올바르게는 공개정보의 가격 반영 여부를 설명하는 것은 효율적 시장 가설이다.

오답 포인트

'공개된 정보'라는 문구 때문에 ②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시험은 문장 일부가 아니라 정식 이론명을 묻는다. 공개정보 반영은 효율적 시장 가설 내부의 준강형 내용이지, '공개정보 가설'이라는 별도 표준 이론명이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보가 가격에 반영되는가를 묻는 문장이 나오면 먼저 효율적 시장 가설을 떠올리고, 반영 정보의 범위가 과거가격인지 공개정보인지 내부정보까지인지에 따라 약형·준강형·강형으로 세분해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효율적 시장 가설 = 정보 반영, 준강형 = 공개정보 반영이다.

NoteBase

문 2. 갑국과 을국 두 나라는 각각 A재와 B재를 생산하고 있다. 갑국은 1시간에 A재 16개 또는 B재 64개를 생산할 수 있다. 을국은 1시간에 A재 24개 또는 B재 48개를 생산할 수 있다. 두 나라 사이에서 교역이 이루어질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갑국은 A재 생산에 절대우위가 있다.

② 을국은 B재 생산에 절대우위가 있다.

③ 갑국은 A재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④ 양국 간 교역에서 교환비율이 A재 1개당 B재 3개일 경우, 갑국은 B재 수출국이 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절대우위와 비교우위를 구분하고, 교환비율이 두 나라의 기회비용 사이에 들어오는지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절대우위는 같은 시간에 더 많이 생산하는 능력이다.
비교우위는 다른 재화를 얼마나 포기해야 하는지, 즉 기회비용이 더 낮은 쪽이다.
갑국은 A재 16개, B재 64개를 만들고 을국은 A재 24개, B재 48개를 만드므로 절대우위는 A재에서 을국, B재에서 갑국에 있다.
기회비용은 갑국이 A 1개당 B 4개, B 1개당 A 1/4개이고, 을국이 A 1개당 B 2개, B 1개당 A 1/2개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표현은 '갑국은 A재 생산에 절대우위가 있다'이다. A재는 갑국이 시간당 16개, 을국이 24개를 생산하므로 절대우위는 을국에 있다.
② X: 틀린 표현은 '을국은 B재 생산에 절대우위가 있다'이다. B재는 갑국이 시간당 64개, 을국이 48개를 생산하므로 절대우위는 갑국에 있다.
③ X: 틀린 표현은 '갑국은 A재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이다. 갑국의 A 1개 기회비용은 B 4개이고 을국의 A 1개 기회비용은 B 2개이므로 A재의 비교우위는 을국에 있다. 갑국의 비교우위는 B재에 있다.
④ O: 교환비율이 A 1개당 B 3개이면 1A=3B이다. 이는 을국의 A 1개 기회비용 2B와 갑국의 A 1개 기회비용 4B 사이에 있으므로 교역이 성립한다. 또한 교역에서는 B 1개로 A 1/3개를 얻을 수 있는데, 갑국은 국내에서 B 1개를 만들 때 A 1/4개만 포기하면 되므로 B재를 생산해 수출하는 편이 유리하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절대우위와 비교우위를 같은 기준으로 보면 ①과 ③을 함께 잘못 고르기 쉽다. 절대우위는 생산량 비교이고, 비교우위는 기회비용 비교라는 기준을 분리해야 한다. ④도 교환비율 A 1개당 B 3개를 그대로 보지 말고 각국의 A재 기회비용 2B, 4B와 비교해야 판단이 선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각 재화의 시간당 생산량으로 절대우위를 본다. 다음으로 한 재화 1개를 만들 때 포기하는 다른 재화의 양을 계산해 비교우위를 정한다. 마지막으로 교역조건은 두 나라의 기회비용 사이에 있는지 확인하고, 어느 재화를 수출할지는 세계 교환비율과 자국의 기회비용을 비교해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절대우위는 생산량, 비교우위는 기회비용, 교역조건은 두 나라 기회비용 사이이다.

NoteBase

문 3. 어느 소비자에게 X재와 Y재는 완전대체재이며 X재 2개를 늘리는 대신 Y재 1개를 줄이더라도 동일한 효용을 얻는다. X재의 시장가격은 2만 원이고 Y재의 시장가격은 6만 원이다. 소비자가 X재와 Y재에 쓰는 예산은 총 60만 원이다. 이 소비자가 주어진 예산에서 효용을 극대화할 때 소비하는 X재와 Y재의 양은?

① X재(개): 0, Y재(개): 10

② X재(개): 15, Y재(개): 5

③ X재(개): 24, Y재(개): 2

④ X재(개): 30, Y재(개): 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완전대체재의 한계효용 대비 가격을 비교해 예산을 어느 재화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 X재 2개 증가와 Y재 1개 감소가 동일한 효용이다.
- X재 가격은 2만 원이다.
- Y재 가격은 6만 원이다.
- 총예산은 60만 원이다.

구해야 할 값:
- 효용을 극대화하는 X재와 Y재의 소비량이다.

주의할 조건:
- X재와 Y재는 완전대체재이므로 효용 1단위당 더 싼 재화에 예산을 모두 쓰는지 먼저 본다.

사용할 공식

동일효용 조건은 $2MU_X - MU_Y = 0$이므로 $MU_Y = 2MU_X$이다. 따라서 효용은 비례적으로 $U = X + 2Y$처럼 둘 수 있다.

효용 1원당 기여는 MU_X/P_X, MU_Y/P_Y로 비교한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완전대체재는 무차별곡선의 기울기가 일정하므로 한계효용 대비 가격이 더 높은 재화만 소비하는 코너해가 최적이 되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X재 2개가 Y재 1개와 같은 효용이므로 Y재 1개의 효용은 X재 2개의 효용과 같다.
2. X재 2개 가격은 4만 원이고 Y재 1개 가격은 6만 원이므로 같은 효용을 X재로 더 싸게 얻는다.
3. 식으로 보면 $MU_X/P_X = 1/2$만 원당 효용, $MU_Y/P_Y = 2/6 = 1/3$만 원당 효용이므로 X재가 더 크다.
4. 따라서 예산 60만 원을 모두 X재에 쓰면 $60 \div 2 = 30$개, Y재는 0개이다.

선지별 해설

① X재 0개, Y재 10개: X
- 예산은 모두 쓰지만 효용은 $U = 0 + 2 \times 10 = 20$이다.
- 같은 예산 60만 원으로 X재만 사면 효용이 30이므로 비효율적이다.
- 틀린 부분은 Y재에만 배분한 점이며, 올바르게는 X재 30개, Y재 0개이다.

② X재 15개, Y재 5개: X
- 효용은 $U = 15 + 2 \times 5 = 25$이다.
- Y재 5개에 쓴 30만 원을 X재로 바꾸면 X재 15개를 더 살 수 있어 총효용이 커진다.
- 틀린 부분은 Y재를 일부 섞은 점이며, 올바르게는 X재 30개, Y재 0개이다.

③ X재 24개, Y재 2개: X
- 효용은 $U = 24 + 2 \times 2 = 28$이다.
- Y재 2개는 12만 원인데, 이를 X재로 바꾸면 X재 6개를 살 수 있어 효용이 더 커진다.
- 틀린 부분은 Y재 2개를 남긴 점이며, 올바르게는 X재 30개, Y재 0개이다.

④ X재 30개, Y재 0개: O
- 예산 60만 원을 전부 X재에 쓰면 정확히 X재 30개를 산다.
- X재가 같은 효용을 더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므로 이 코너해가 효용극대화 점이다.

오답 포인트

완전대체재 문제에서 많은 수험생이 무차별하게 섞어 사는 내부해를 떠올리기 쉽다. 이 문항은 X재 2개와 Y재 1개의 효용이 같다는 조건만 보고 끝내면 안 되고, 그 동일효용 묶음의 가격이 X재 4만 원, Y재 6만 원으로 다르다는 점을 비교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완전대체재가 나오면 먼저 같은 효용 묶음을 만든 뒤 그 묶음의 비용을 비교한다. 같은 효용을 더 싸게 주는 재화가 있으면 예산을 그 재화에 모두 배분하는 코너해가 최적이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완전대체재는 같은 효용을 더 싸게 주는 재화에 올인하므로 한계효용 대비 가격이 큰 재화를 전부 선택한다.

NoteBase

문 4. 사람들의 선호체계가 변화하여 막걸리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했다고 하자. 이와 같은 막걸리 가격 상승이 막걸리를 생산하는 인부의 균형고용량과 균형임금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막걸리를 생산하는 인부의 노동시장은 완전경쟁적이다.)

① 노동의 한계생산가치는 증가하여 고용량은 증가하고 임금은 증가한다.

② 노동의 한계생산가치는 증가하여 고용량은 감소하고 임금은 증가한다.

③ 노동의 한계생산가치는 감소하여 고용량은 증가하고 임금은 감소한다.

④ 노동의 한계생산가치는 감소하여 고용량은 감소하고 임금은 감소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재화 가격 상승이 노동의 한계생산가치와 노동수요를 어떻게 바꾸는지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이다.

사례 정리

- 사람들의 선호 변화로 막걸리 수요가 증가하였다.
- 그 결과 막걸리 가격이 상승하였다.
- 막걸리 생산 인부의 노동시장은 완전경쟁적이므로 노동수요 증가가 균형고용량과 균형임금에 그대로 반영된다.

핵심 개념

- 노동의 한계생산가치는 노동 1단위를 추가 고용했을 때 늘어나는 생산물의 시장가치이다.
- 완전경쟁적 생산물시장에서 노동의 한계생산가치는 $VMP_L = P \times MP_L$로 나타난다.
- 생산물 가격 P가 오르면 한계생산 MP_L가 같아도 VMP_L가 커지므로 기업의 노동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적용 기준

이 사례에서는 막걸리 가격 상승이 노동의 한계생산가치를 높이는지를 먼저 본다. 한계생산가치가 증가하면 기업은 각 임금수준에서 더 많은 노동을 고용하려 하므로 완전경쟁 노동시장의 균형임금과 균형고용량이 함께 상승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막걸리 가격 상승은 VMP_L를 증가시켜 노동수요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완전경쟁 노동시장에서는 그 결과 균형고용량과 균형임금이 모두 증가한다.

② X: "노동의 한계생산가치는 증가"까지는 맞지만 "고용량은 감소"가 틀렸다. 노동수요가 증가했으므로 균형고용량은 감소가 아니라 증가한다.

③ X: "노동의 한계생산가치는 감소"가 틀렸다. 생산물 가격이 상승했으므로 한계생산가치는 감소가 아니라 증가하며, 따라서 임금도 감소가 아니라 증가한다.

④ X: "노동의 한계생산가치는 감소"와 "고용량은 감소"가 모두 틀렸다. 올바르게는 생산물 가격 상승으로 한계생산가치가 증가하고, 그 결과 균형고용량과 균형임금이 함께 증가한다.

오답 포인트

막걸리 가격 상승을 소비자 측 수요 변화로만 보고 생산요소시장에 연결하지 못하면 틀리기 쉽다. 이 문항의 핵심 함정은 생산물 수요 증가가 곧바로 노동수요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을 놓치게 만드는 데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생산물 가격이 오르면 먼저 $VMP_L = P \times MP_L$를 떠올린다. 가격 상승이면 노동의 한계생산가치가 커지고, 완전경쟁 노동시장에서는 노동수요 우측 이동으로 임금과 고용이 함께 오른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생산물 가격 상승 → 노동의 한계생산가치 상승 → 노동수요 증가 → 임금·고용 동반 상승이다.

NoteBase

문 5. 어느 나라의 생산가능 인구는 100명이다. 이들 중 70명은 취업자이고 비경제활동 인구는 20명일 때, 이 나라의 실업자의 수는?

① 30명

② 20명

③ 10명

④ 0명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생산가능인구를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누고, 다시 경제활동인구를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누는 관계를 이용해 실업자 수를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 주어진 값: 생산가능인구 100명, 취업자 70명, 비경제활동인구 20명이다.
- 구해야 할 값: 실업자 수이다.
- 주의할 조건: 실업자는 생산가능인구 전체에서 바로 구하지 않고, 먼저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해 경제활동인구를 구한 뒤 취업자를 빼서 계산한다.

사용할 공식

경제활동인구 = 생산가능인구 -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 안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니므로 먼저 제외해야 한다.

계산 과정

1. 경제활동인구는 100명에서 비경제활동인구 20명을 뺀 80명이다.
2. 경제활동인구 80명은 취업자와 실업자의 합이다.
3. 실업자는 80명에서 취업자 70명을 뺀 10명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30명은 생산가능인구 100명에서 취업자 70명만 뺀 값이다. 이 계산에는 비경제활동인구 20명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 실업자 수가 아니다. 틀린 표현은 실업자를 생산가능인구 전체에서 바로 구한 점이고, 올바르게는 경제활동인구 80명에서 취업자 70명을 빼서 10명으로 계산해야 한다.
② X: 20명은 비경제활동인구 수일 뿐 실업자 수가 아니다. 틀린 표현은 비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를 같은 집단처럼 본 점이고, 올바르게는 비경제활동인구는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③ O: 경제활동인구는 100명 - 20명 = 80명이고, 실업자는 80명 - 70명 = 10명이다. 계산 결과와 일치하므로 옳다.
④ X: 0명이라면 경제활동인구 80명 전원이 취업자여야 하지만 실제 취업자는 70명이다. 틀린 표현은 취업자와 경제활동인구를 같게 본 점이고, 올바르게는 나머지 10명이 실업자이다.

오답 포인트

가장 흔한 실수는 생산가능인구에서 취업자를 바로 빼서 30명을 구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비경제활동인구를 먼저 제외해야 한다는 점을 묻는다. 또 비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를 혼동하면 20명을 고르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노동시장 인구 문제는 먼저 생산가능인구를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눈다. 그다음 경제활동인구를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누어 빈칸 값을 계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생산가능인구 = 경제활동인구 +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 실업자이다.

NoteBase

문 6. 외부불경제를 초래하는 독점기업을 고려하자. 외부불경제의 크기는 이 기업의 생산량 Q에 비례하는 kQ이다. 이 기업의 총비용은 $50 + 0.5Q^2$이고 이 시장의 수요량은 가격 P의 함수 $Q = 200 - 2P$로 주어진다.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 기업의 이윤극대화 산출량은 50이다.

② k=20일 때 사회적 후생 극대화를 위해서는 독점기업에 kQ의 조세를 부과하면 된다.

③ k=25일 때 시장의 거래량은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고 있다.

④ 이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위해 가격을 75로 설정할 것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독점의 이윤극대화 산출량과 외부불경제를 반영한 사회적 최적 산출량을 비교해 조세·보조금 방향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수요함수는 $Q = 200 - 2P$, 역수요함수는 $P = 100 - 0.5Q$, 총비용은 $TC = 50 + 0.5Q^2$이다.
구해야 할 값: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산출량과 가격, 외부불경제를 고려한 사회적 최적 산출량이다.
주의할 조건: 외부불경제의 크기가 kQ이면 한계외부비용은 k이고, 독점은 원래 산출량을 줄이는 힘이 있으므로 외부효과와 독점 왜곡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

사용할 공식

총수입은 $TR = PQ = (100 - 0.5Q)Q = 100Q - 0.5Q^2$이므로 한계수입은 $MR = 100 - Q$이다.
총비용에서 한계비용은 $MC = Q$이다.
사회적 최적 산출량은 한계편익과 한계사회비용을 같게 두어 $P = MSC$로 구한다. 외부불경제가 kQ이면 $MSC = MC + k = Q + k$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①, ④는 독점의 이윤극대화 조건 $MR = MC$로 판단하고, ②, ③은 외부불경제를 포함한 사회후생 극대화 조건 $P = MSC$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독점의 이윤극대화는 $MR = MC$이므로 $100 - Q = Q$에서 $Q_m = 50$이다.
2. 이때 가격은 $P_m = 100 - 0.5 \times 50 = 75$이다.
3. 사회적 최적 산출량은 $100 - 0.5Q = Q + k$에서 구한다.
4. $k = 20$이면 $1.5Q = 80$이므로 $Q^* = 160/3$이다. 이는 50보다 크므로 독점은 이미 너무 적게 생산하고 있고, 세금이 아니라 보조금이 필요하다.
5. $k = 25$이면 $1.5Q = 75$이므로 $Q^* = 50$이다. 이 경우 독점 산출량과 사회적 최적 산출량이 일치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독점의 이윤극대화 조건은 $MR = MC$이다. $100 - Q = Q$이므로 $Q = 50$이 맞다.
② X: $k = 20$이면 사회적 최적 산출량은 $Q^* = 160/3 \approx 53.3$으로 독점 산출량 50보다 크다. 따라서 생산을 더 늘려야 하므로 세금을 부과하면 안 된다. 틀린 표현은 '독점기업에 kQ의 조세를 부과하면 된다'이고, 올바르게는 '독점기업에 단위당 20/3의 보조금, 즉 총 $(20/3)Q$의 보조금을 지급하면 사회적 최적 산출량을 유도할 수 있다'이다.
③ O: $k = 25$이면 사회적 최적 산출량이 50이고 독점의 이윤극대화 산출량도 50이므로 시장의 거래량이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고 있다.
④ O: 독점의 이윤극대화 산출량 $Q = 50$을 역수요함수에 대입하면 $P = 100 - 0.5 \times 50 = 75$이다. 따라서 가격을 75로 설정한다는 설명이 맞다.

오답 포인트

외부불경제가 있다고 해서 항상 조세가 정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문항은 독점의 산출 축소 효과와 외부불경제의 산출 확대 억제 필요를 함께 비교해야 한다는 점이 함정이다. ②처럼 '외부불경제이므로 세금'만 보고 판단하면 독점이 이미 과소생산 상태일 수 있다는 점을 놓치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독점과 외부효과가 함께 나오면 먼저 $MR = MC$로 독점 산출량을 구하고, 다음에 $P = MSC$로 사회적 최적 산출량을 구해 두 값을 비교한다. 사회적 최적 산출량이 독점 산출량보다 크면 보조금, 작으면 조세 방향이 된다.

암기 포인트

독점은 원래 생산을 줄이고, 외부불경제는 생산을 더 줄이게 만든다. 어느 힘이 더 큰지는 Q_m과 Q^*를 직접 비교해 판단한다.

NoteBase

문 7. 어느 경제에서 생산량과 기술 및 요소 투입 간에 $Y = AF(L, K)$의 관계가 성립하며, $F(L, K)$는 노동, 자본에 대하여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CRS)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Y, A, L, K는 각각 생산량, 기술수준, 노동, 자본을 나타낸다.)

① 생산요소인 노동이 2배 증가하면 노동단위 1인당 생산량은 증가한다.

② 생산요소인 노동과 자본이 각각 2배 증가하면 노동단위 1인당 생산량은 증가한다.

③ 생산요소인 노동과 자본이 각각 2배 증가하고 기술수준이 2배로 높아지면 노동단위 1인당 생산량은 2배 증가한다.

④ 생산요소인 자본이 2배 증가하고 기술수준이 2배로 높아지면 노동단위 1인당 생산량은 2배 증가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과 노동생산성의 관계를 이용해 투입요소와 기술수준 변화가 Y/L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은 모든 생산요소를 같은 비율로 늘리면 산출도 그 비율만큼 늘어나는 성질이며, $F(\lambda L, \lambda K) = \lambda F(L, K)$로 쓴다.
이때 노동 1인당 생산량은 $Y/L = AF(1, K/L)$로 정리되므로, 노동생산성은 기술수준 A와 자본노동비율 K/L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노동과 자본을 같은 비율로 함께 늘리면 K/L은 변하지 않고, 기술수준 A가 바뀌면 그 비율만큼 노동생산성이 변한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경제학원론 · 2019 · 2월

선지별 해설

① X
노동만 2배로 늘리면 K/L이 하락하므로 노동생산성 Y/L이 증가한다고 할 수 없다.
틀린 표현은 '노동단위 1인당 생산량은 증가한다'이다.
올바르게는 '자본이 고정된 상태에서 노동만 2배로 늘리면 노동생산성은 일반적으로 하락하거나 적어도 증가가 보장되지 않는다'이다.

② X
노동과 자본을 각각 2배로 늘리면 CRS에 의해 산출량 Y도 2배가 되지만 노동도 2배이므로 Y/L은 변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노동단위 1인당 생산량은 증가한다'이다.
올바르게는 '노동과 자본을 같은 비율로 늘리면 노동생산성은 변하지 않는다'이다.

③ O
노동과 자본을 각각 2배로 늘리면 F 부분이 2배가 되고, 기술수준 A까지 2배가 되면 전체 산출량은 4배가 된다.
노동은 2배이므로 노동생산성은 $4/2 = 2$배가 되어 정확히 2배 증가한다.

④ X
자본만 2배로 늘리고 기술수준도 2배로 높이면 노동생산성은 $2AF(1, 2K/L)$가 된다.
이는 원래의 $AF(1, K/L)$보다 커지지만 정확히 2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틀린 표현은 '노동단위 1인당 생산량은 2배 증가한다'이다.
올바르게는 '자본노동비율 상승 효과까지 더해져 노동생산성은 2배보다 더 커질 수 있으나, CRS만으로 정확히 2배라고 결론낼 수는 없다'이다.

오답 포인트

CRS를 '어떤 한 요소만 늘려도 1인당 생산량이 비례해서 늘어난다'로 오해하면 ①과 ④에 흔들리기 쉽다. 이 문항의 핵심은 총산출량 Y가 아니라 노동생산성 Y/L을 봐야 한다는 점이며, Y/L은 A와 K/L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놓치면 ②도 틀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CRS를 이용해 $Y/L = AF(1, K/L)$ 형태로 바꾼다. 그다음 각 선지에서 A가 변하는지, K/L이 변하는지, 둘 다 그대로인지 확인하면 노동생산성의 방향과 배수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CRS에서는 '같이 두 배면 1인당은 그대로, 기술만 두 배면 1인당도 두 배'가 기본이고, 자본노동비율 변화가 있으면 1인당 생산량도 함께 달라진다.

NoteBase

문 8. A는 현재 시가로 1,600만 원인 귀금속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도난당할 확률이 0.4라고 한다. A의 효용함수는 $U = 2\sqrt{W}$(W는 보유자산의 화폐가치)이며, 보험에 가입할 경우 도난당한 귀금속을 현재 시가로 전액 보상해준다고 한다. 보험 가입 전 A의 기대효용과 A가 보험에 가입할 경우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보험료는?

① 기대효용: 36, 최대보험료: 1,276만 원

② 기대효용: 48, 최대보험료: 1,024만 원

③ 기대효용: 36, 최대보험료: 1,024만 원

④ 기대효용: 48, 최대보험료: 1,276만 원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기대효용과 확실성등가를 이용해 보험 가입 전 기대효용과 최대 보험료를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현재 귀금속의 가치: 1,600만원

도난 확률: 0.4, 도난되지 않을 확률: 0.6

도난 시 보유자산 가치: 0

효용함수: $U = 2\sqrt{W}$

전액보상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P만큼 내고 확정적으로 $1600 - P$의 자산을 보유하게 된다.

사용할 공식

보험 가입 전 기대효용은 $EU = 0.6 \cdot 2\sqrt{1600} + 0.4 \cdot 2\sqrt{0}$이다.

보험 가입 후 효용은 자산이 확정되므로 $U = 2\sqrt{1600 - P}$이다.

최대 보험료는 보험 가입 전 기대효용과 보험 가입 후 확정효용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구한다.

계산 과정

1. 보험 가입 전 기대효용은 $0.6 \cdot 2\sqrt{1600} + 0.4 \cdot 2\sqrt{0} = 0.6 \cdot 80 + 0 = 48$이다.
2. 보험 가입 후에는 도난 여부와 무관하게 자산이 $1600 - P$로 확정되므로 효용은 $2\sqrt{1600 - P}$이다.
3. 최대 보험료는 무차별 조건 $2\sqrt{1600 - P} = 48$에서 구한다.
4. 정리하면 $\sqrt{1600 - P} = 24$, 따라서 $1600 - P = 576$이고 $P = 1024$이다.
5. 따라서 기대효용은 48, 최대 보험료는 1,024만원이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경제학원론 · 2019 · 2월

선지 판단

1번: X. 기대효용을 36으로 본 부분이 틀리다. $\sqrt{1600} = 40$이고 효용함수 앞의 2를 곱해야 하므로 도난되지 않을 때 효용은 80이다. 따라서 기대효용은 48이어야 한다. 틀린 표현은 "기대효용 36"이고, 올바르게는 "기대효용 48, 최대 보험료 1,024만원"이다.
2번: O. 기대효용은 48이고, 무차별 조건에서 구한 최대 보험료는 1,024만원이므로 제시된 두 값이 모두 맞다.
3번: X. 최대 보험료 1,024만원은 맞지만 기대효용 36이 틀리다. 기대효용을 잘못 계산하면 뒤 계산의 출발점이 무너진다. 올바르게는 "기대효용 48, 최대 보험료 1,024만원"이다.
4번: X. 기대효용 48은 맞지만 최대 보험료 1,276만원이 틀리다. 기대효용 48을 기준으로 하면 확실성등가는 576이므로 보험료는 $1600 - 576 = 1024$이다. 틀린 표현은 "최대 보험료 1,276만원"이고, 올바르게는 "최대 보험료 1,024만원"이다.

오답 포인트

효용함수의 앞에 붙은 2를 빼먹으면 기대효용을 36처럼 잘못 계산하기 쉽다. 또 최대 보험료는 기대부의 차이가 아니라 기대효용과 확정효용을 같게 두어 구하는 값이라는 점을 놓치면 1,276만원 같은 오답이 나온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보험 문제는 먼저 상태별 부를 적고 기대효용을 계산한 뒤, 전액보상 여부를 확인하여 보험 가입 후 부를 확정값으로 바꾸고 무차별 조건으로 최대 보험료를 구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최대 보험료는 기대손실이 아니라 기대효용과 확정효용이 같아지는 보험료이다.

NoteBase

문 9. 인플레이션은 사전에 예상된 부분과 예상하지 못한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은 여러 가지 경로로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투기가 성행하게 된다.

② 소득재분배 효과가 발생한다.

③ 피셔(Fisher) 가설이 성립하게 된다.

④ 장기계약이 만들어지기 어렵게 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예상된 인플레이션과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의 차이, 그리고 피셔 가설이 전제하는 기대인플레이션의 의미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예상된 인플레이션은 경제주체가 미리 예상하여 임금, 금리, 계약에 반영한 물가상승이다.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은 실제 물가상승률이 기대인플레이션을 벗어나 실질소득, 실질채권, 실질이자율을 바꾸는 물가상승이다.
피셔 가설은 명목이자율이 기대인플레이션을 반영해 $i = r + \pi^e$로 결정된다는 설명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커지면 화폐 보유나 고정채권보다 실물자산 보유가 유리해 보여 투기적 거래가 늘어나기 쉽다.

② O
예상 밖의 물가상승은 고정임금 생활자와 채권자에게 불리하고 채무자와 실물자산 보유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만든다.

③ X
틀린 부분은 '피셔(Fisher) 가설이 성립하게 된다'이다.
피셔 가설은 기대인플레이션이 명목이자율에 반영되는 관계를 말하므로,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성립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 실제의 괴리로 실질이자율이 흔들린다.
올바르게는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피셔 가설이 설명하는 기대인플레이션 조정이 빗나가 채권자·채무자 간 재분배와 실질이자율 왜곡이 나타난다.

④ O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크면 장래 화폐가치 예측이 어려워져 장기계약에서 가격조건을 정하기 어렵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피셔 가설을 단순히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금리도 오른다'로만 외우면 ③을 옳다고 착각하기 쉽다. 이 가설은 예상된 인플레이션의 반영을 설명하는 것이지,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의 부정적 효과를 설명하는 문장이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피셔 가설, 재분배, 투기, 장기계약이 함께 나오면 먼저 그것이 기대가 반영된 인플레이션인지 기대를 벗어난 인플레이션인지 구분한다. 기대가 반영된 관계는 피셔 가설이고, 기대를 벗어난 충격은 재분배와 계약교란으로 이어진다.

암기 포인트

기대인플레이션은 명목이자율에 반영되고, 예상 밖 인플레이션은 재분배와 계약교란을 만든다.

NoteBase

문 10. 적극적인 경기 안정화 정책의 사용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쟁에서 정책의 동태적인 비일관성 (또는 시간 비일관성)의 의미에 대한 서술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정책의 집행과 효과 발생 과정에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책 효과가 의도한 대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② 정책 당국은 시장의 암묵적 신뢰를 깨고 단기적인 정책목표를 추구할 인센티브를 가진다.

③ 정권마다 다른 정책의 방향을 가지므로 거시 경제 정책은 장기적으로 일관성을 가지기 어렵다.

④ 시장의 상황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므로 정책의 방향을 시의적절하게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적극적 경기안정화정책 논쟁에서 시간비일관성의 의미를 정확히 구별하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시간비일관성은 정책당국이 사전에 약속한 정책이 있더라도 사후에는 단기 유인을 따라 다른 정책을 선택하려는 문제이다.
정책시차는 정책 집행과 효과 발생 사이의 시간 차이를 뜻하므로 시간비일관성과 다른 개념이다.
정권교체에 따른 정책방향 변화는 정치적 정책변화의 문제이고, 시간비일관성의 핵심은 같은 정책당국이라도 사후 유인 때문에 약속을 깨기 쉽다는 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정책의 집행과 효과 발생 사이에 시차가 있어 의도한 효과가 늦거나 빗나갈 수 있다는 설명은 정책시차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표현은 시간비일관성의 의미를 시차 문제로 설명한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시간비일관성은 사전약속과 사후유인이 충돌하여 정책당국이 약속을 깨려는 유인이 생기는 문제이다.

② O
시간비일관성은 정책당국이 사전에 안정적 정책을 약속하더라도 사후에는 생산·고용 부양 등 단기 목표를 위해 더 팽창적인 정책을 택하려는 유인을 가진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시장은 정책당국의 약속을 완전히 믿지 않게 되고 정책 신뢰성이 약화된다.

③ X
정권마다 정책 방향이 달라지는 현상은 정치적 경기순환이나 정책기조 변화에 가까운 설명이다.
틀린 표현은 정권교체로 장기 일관성이 어렵다는 점을 시간비일관성의 뜻으로 본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시간비일관성은 정권교체가 없어도 재량정책 아래에서 사전약속과 사후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이다.

④ X
시장상황 변화에 맞추어 정책 방향을 탄력적으로 고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은 재량정책의 장점 또는 유연성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표현은 재량적 선택의 바람직함을 시간비일관성의 의미로 본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시간비일관성은 그런 재량이 오히려 약속 위반 유인을 만들어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뜻이다.

오답 포인트

①의 정책시차, ③의 정권교체, ④의 재량적 유연성은 모두 거시경제정책 문맥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라 혼동하기 쉽다. 이 문항은 원인을 정책집행의 느림이나 정치변화에서 찾는지, 아니면 사전약속 대비 사후유인에서 찾는지로 구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가 정책 효과가 늦게 나타나는 문제를 말하면 정책시차로 본다. 선지가 정권변화나 정책기조 변화를 말하면 정치적 정책변화로 본다. 사전에 한 약속을 사후에 깨려는 유인을 말하면 시간비일관성으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시간비일관성은 사전약속과 사후유인의 충돌이고, 정책시차는 정책효과가 늦게 나타나는 문제이다.

NoteBase

문 11.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조사 결과가 다음 표와 같다고 하자. 시간당 최저임금을 8원으로 할 경우 발생하는 비자발적 실업의 규모는 ㉠이고, 이때 실업을 완전히 없애기 위한 보조금으로 소요되는 필요 예산이 ㉡이다. ㉠과 ㉡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시간당 임금(원)	6	7	8
수요량(개)	40	30	20
공급량(개)	20	30	40

① 10, 20

② 10, 40

③ 20, 40

④ 20, 8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최저임금이 균형임금보다 높게 설정될 때 비자발적 실업 규모와 이를 없애는 고용보조금 총액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자료 읽는 순서

1.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지점을 찾아 균형임금이 7원임을 확인한다.
2. 최저임금 8원에서 노동 수요량 20개, 노동 공급량 40개를 읽는다.
3. 실업 규모는 공급량에서 수요량을 뺀 값으로 계산하고, 보조금은 기업의 실질임금을 노동수요 40개가 되는 수준까지 낮추는 금액에 고용량을 곱해 계산한다.

핵심 근거

최저임금이 8원이면 노동 수요량은 20개이고 노동 공급량은 40개이므로 비자발적 실업은 20개이다.
실업을 완전히 없애려면 기업이 노동 40개를 고용하도록 해야 한다. 표에서 노동수요 40개는 임금 6원일 때이므로, 노동자가 8원을 받으면서도 기업은 6원만 부담하게 하려면 노동 1개당 2원의 보조금이 필요하다.
따라서 총예산은 2원 × 40개 = 80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10, 20"이 틀리다. 근거 위치는 임금 8원의 수요량 20개, 공급량 40개이다. 실업 규모는 40-20=20이므로 10이 아니라 20이다. 또 완전고용을 위해 필요한 보조금 총액은 2×40=80이므로 20이 아니라 80이다. 따라서 "20, 80"으로 고쳐야 한다.
② X: "10, 40"이 틀리다. 실업 규모는 임금 8원에서 공급량 40개와 수요량 20개의 차이인 20이므로 10이 아니다. 총예산도 노동 1개당 2원 보조금을 40개 고용에 지급해야 하므로 40이 아니라 80이다. 따라서 "20, 80"으로 고쳐야 한다.
③ X: "20, 40"은 앞의 20만 맞고 뒤의 40이 틀리다. 실업 규모는 맞지만, 총예산은 보조금 2원을 실제 고용되는 40개 노동 모두에 지급해야 하므로 2×40=80이다. 따라서 "20, 80"으로 고쳐야 한다.
④ O: "20, 80"이 맞다. 임금 8원에서 비자발적 실업은 공급량 40개-수요량 20개=20개이다. 이를 없애려면 기업의 실질임금을 6원으로 낮춰 노동수요를 40개로 만들어야 하므로 보조금은 노동 1개당 2원, 총 80원이다.

오답 포인트

실업 규모는 최저임금 시점의 공급량과 수요량 차이로 계산해야 하는데, 균형점과 혼동하면 10으로 잘못 읽기 쉽다. 또 보조금 총액은 부족한 20개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고용되는 40개 전체에 노동 1개당 2원씩 지급한다는 점을 놓치면 40으로 오답 처리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최저임금 문제는 먼저 균형임금과 최저임금 시점의 수요량·공급량을 읽는다. 다음에 실업 규모는 공급량-수요량으로 계산하고, 보조금 총액은 목표 고용량을 만드는 데 필요한 노동 1개당 보조금에 그 목표 고용량을 곱해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최저임금 초과 설정이면 실업은 공급-수요, 보조금 총액은 1인당 보조금×목표 고용량이다.

NoteBase

문 12.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한 개방경제에서, <보기> 중 이 경제의 통화가치를 하락시키는(환율 상승)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원유 수입액의 감소
ㄴ. 반도체 수출액의 증가
ㄷ. 외국인의 국내주식 투자 위축
ㄹ. 자국 은행의 해외대출 증가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변동환율제도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바뀔 때 자국통화 가치가 하락하고 환율이 상승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환율 상승은 외화 1단위당 자국통화 가격이 올라 자국통화 가치가 하락하는 상태이다.
수입 증가는 외화 수요를 늘려 환율 상승 요인이 되고, 수출 증가는 외화 공급을 늘려 환율 하락 요인이 된다.
외국인의 국내투자 축소와 자국의 해외투자 확대는 모두 자본유출 방향이므로 환율 상승 요인이 된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경제학원론 · 2019 · 2월

선지별 해설

1번 X
ㄱ은 원유 수입액 감소이므로 외화를 사려는 수요가 줄어든다. 이는 환율 상승이 아니라 환율 하락 요인이다.
ㄷ은 외국인의 국내주식 투자 위축이므로 외화 유입이 줄어 자국통화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 1번은 ㄱ을 잘못 포함했으므로 틀리다. 틀린 표현은 "ㄱ, ㄷ"이고, 올바르게는 "ㄷ, ㄹ"이다.

2번 X
ㄱ은 수입 감소라서 환율 하락 요인이고, ㄹ은 자국 은행의 해외대출 증가이므로 외화 수요가 늘어 환율 상승 요인이다. 2번은 ㄱ을 포함한 점이 틀리다. 틀린 표현은 "ㄱ, ㄹ"이고, 올바르게는 "ㄷ, ㄹ"이다.

3번 X
ㄴ은 반도체 수출액 증가이므로 외화 공급이 늘어 환율 하락 요인이다.
ㄷ은 외국인의 국내주식 투자 위축이므로 환율 상승 요인이다. 3번은 ㄴ을 잘못 포함했으므로 틀리다. 틀린 표현은 "ㄴ, ㄷ"이고, 올바르게는 "ㄷ, ㄹ"이다.

4번 O
ㄷ은 외국인의 국내주식 투자 위축으로 외화 유입이 감소하는 경우이고, ㄹ은 자국 은행의 해외대출 증가로 외화 유출이 늘어나는 경우이다. 둘 다 자국통화 가치 하락, 즉 환율 상승 요인에 해당하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수입액 감소와 수출액 증가는 모두 외환시장에서 자국통화 강세, 환율 하락 쪽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거꾸로 잡으면 틀리기 쉽다. 특히 발문이 "통화가치 하락=환율 상승"인지 "통화가치 상승=환율 하락"인지 방향을 먼저 정리하지 않으면 ㄱ, ㄴ을 착각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보기마다 외화 수요가 늘어나는지, 외화 공급이 늘어나는지를 먼저 본다. 외화 수요 증가 또는 외화 공급 감소이면 환율 상승, 외화 수요 감소 또는 외화 공급 증가이면 환율 하락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수입·해외대출 증가는 외화 수요 쪽, 수출·외국인 국내투자는 외화 공급 쪽이다.

NoteBase

문 13. 어떤 독점기업이 시장을 A와 B로 나누어 이윤극대화를 위한 가격차별정책을 시행하고자 한다. A시장의 수요함수는 $Q_A = -2P_A + 60$이고 B시장의 수요함수는 $Q_B = -4P_B + 80$이라고 한다(Q_A, Q_B는 각 시장에서 상품의 총수요량, P_A, P_B는 상품의 가격임). 이 기업의 한계비용이 생산량과 관계없이 2원으로 고정되어 있을 때, A시장과 B시장에 적용될 상품가격은?

① A시장: 14, B시장: 10

② A시장: 16, B시장: 11

③ A시장: 14, B시장: 11

④ A시장: 16, B시장: 1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3급 가격차별을 하는 독점기업이 각 시장에서 $MR = MC$를 적용해 최적 가격을 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 A시장 수요: $Q_A = -2P_A + 60$
- B시장 수요: $Q_B = -4P_B + 80$
- 한계비용: 생산량과 무관하게 2원

구해야 할 값
- 가격차별 시 A시장 가격과 B시장 가격

주의할 조건
- 시장별 수요가 다르므로 각 시장의 한계수입을 따로 구해 공통 한계비용 2원과 같게 두어야 한다.

사용할 공식

시장분할 독점의 이윤극대화 조건은 각 시장에서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것이다.

$MR_A = MC, \quad MR_B = MC$

선형 역수요 $P = a - bQ$에서는

$MR = a - 2bQ$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가격차별 독점기업이 각 시장의 판매량을 독립적으로 정하고, 추가 1단위 판매에서 얻는 수입이 공통 한계비용과 같아질 때 전체이윤이 최대가 되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A시장 수요를 역수요로 바꾸면 $P_A = 30 - \frac{Q_A}{2}$이다. 따라서 총수입은 $TR_A = (30 - \frac{Q_A}{2})Q_A = 30Q_A - \frac{Q_A^2}{2}$, 한계수입은 $MR_A = 30 - Q_A$이다.
2. $MR_A = MC$를 적용하면 $30 - Q_A = 2$이므로 $Q_A = 28$이다. 이를 역수요에 대입하면 $P_A = 30 - \frac{28}{2} = 16$이다.
3. B시장 수요를 역수요로 바꾸면 $P_B = 20 - \frac{Q_B}{4}$이다. 따라서 총수입은 $TR_B = (20 - \frac{Q_B}{4})Q_B = 20Q_B - \frac{Q_B^2}{4}$, 한계수입은 $MR_B = 20 - \frac{Q_B}{2}$이다.
4. $MR_B = MC$를 적용하면 $20 - \frac{Q_B}{2} = 2$이므로 $Q_B = 36$이다. 이를 역수요에 대입하면 $P_B = 20 - \frac{36}{4} = 11$이다.
5. 계산 결과 적용 가격은 A시장 16원, B시장 11원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A시장 14원, B시장 10원은 둘 다 계산값과 다르다. A시장은 $Q_A = 28$을 수요식에 대입하면 16원이고, B시장은 $Q_B = 36$을 수요식에 대입하면 11원이다. 틀린 표현은 "A시장 14원, B시장 10원"이고, 올바르게는 "A시장 16원, B시장 11원"이다.

② O: A시장 16원, B시장 11원은 각 시장에서 $MR = MC = 2$를 적용해 구한 값과 일치한다. 수요가 덜 탄력적인 A시장의 가격이 더 높게 나온다는 가격차별 원리와도 맞는다.

③ X: B시장 11원은 맞지만 A시장 14원이 틀리다. A시장은 $P_A = 30 - \frac{28}{2} = 16$이어야 하므로 틀린 표현은 "A시장 14원"이고, 올바르게는 "A시장 16원"이다.

④ X: A시장 16원은 맞지만 B시장 10원이 틀리다. B시장은 $P_B = 20 - \frac{36}{4} = 11$이어야 하므로 틀린 표현은 "B시장 10원"이고, 올바르게는 "B시장 11원"이다.

오답 포인트

수요함수 $Q = a - bP$를 바로 다루지 말고 먼저 역수요로 바꾼 뒤 한계수입을 구해야 한다는 점이 함정이다. 선형수요에서 한계수입은 수요곡선과 같은 절편, 두 배의 기울기를 가진다는 점을 놓치면 가격을 한 단계씩 낮게 잘못 계산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시장분할 독점 문제가 나오면 시장별로 수요를 역수요로 바꾸고, 각 시장의 MR을 구한 뒤, 각각을 공통 MC와 같게 두어 수량을 구하고, 마지막에 그 수량을 다시 수요식에 대입해 가격을 구하면 된다. 가격은 수요가 덜 탄력적인 시장에서 더 높게 형성된다.

암기 포인트

3급 가격차별 독점은 시장별로 $MR_i = MC$를 맞추고, 선형수요에서는 MR의 기울기가 수요의 두 배가 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NoteBase

문 14. 중앙은행이 테일러 준칙(Taylor rule)하에서 통화정책을 실행한다고 하자. 현재의 인플레이션율이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와 같고 현재의 생산량이 잠재생산량 수준과 같을 경우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낮추는 확장적 통화정책을 펼친다.

②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높이는 긴축적 통화정책을 펼친다.

③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종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통화정책을 펼친다.

④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갭과 생산량 갭이 모두 양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따른 통화정책을 펼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테일러 준칙에서 인플레이션 갭과 생산량 갭이 모두 0일 때 기준금리가 어떤 수준으로 결정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테일러 준칙은 기준금리를 중립 명목금리를 기준으로 인플레이션 갭과 생산량 갭의 방향에 따라 조정하는 준칙이다.
중립 명목금리는 경제를 과열시키지도 침체시키지도 않는 금리 수준이다.
현재 인플레이션율이 목표치와 같으면 인플레이션 갭은 0이고, 현재 생산량이 잠재생산량과 같으면 생산량 갭도 0이므로 기준금리는 중립 수준에 머문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경제학원론 · 2019 · 2월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표현은 '기준금리를 낮추는 확장적 통화정책'이다.
문제의 조건에서는 인플레이션 갭도 0이고 생산량 갭도 0이므로 기준금리를 추가로 낮출 이유가 없다.
올바르게는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중립 수준으로 유지한다'이다.

② X
틀린 표현은 '기준금리를 높이는 긴축적 통화정책'이다.
인플레이션이 목표를 웃돌거나 생산량이 잠재생산량을 초과할 때에야 금리를 올릴 근거가 생기는데, 이 문제에서는 두 조건이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중립 수준으로 유지한다'이다.

③ O
현재 인플레이션율이 목표치와 같고 현재 생산량이 잠재생산량과 같으므로 두 갭이 모두 0이다.
따라서 테일러 준칙에 따르면 기준금리는 중립과 동일한 수준에서 유지된다.

④ X
틀린 표현은 '인플레이션 갭과 생산량 갭이 모두 양'이다.
문제의 조건은 인플레이션율이 목표치와 같고 생산량이 잠재생산량과 같다는 것이므로 두 갭은 양이 아니라 0이다.
올바르게는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갭과 생산량 갭이 모두 0이라고 판단하고 중립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한다'이다.

오답 포인트

테일러 준칙 문제에서는 경기 상황을 막연히 확장 또는 긴축으로 연결하면 오답이 된다. 이 문항의 함정은 '목표치와 같다', '잠재생산량과 같다'를 각각 인플레이션 갭 0, 생산량 갭 0으로 바로 바꾸지 못하게 만드는 데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테일러 준칙 문항은 먼저 인플레이션 갭의 부호와 생산량 갭의 부호를 확인한다. 인플레이션율=목표치이면 인플레이션 갭은 0이고, 생산량=잠재생산량이면 생산량 갭도 0이다. 두 갭이 모두 0이면 기준금리는 중립 명목금리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테일러 준칙은 갭의 부호로 본다. 인플레이션 갭 0, 생산량 갭 0이면 기준금리는 중립 수준이다.

NoteBase

문 15. 최근 A는 비상금으로 숨겨두었던 현금 5천만 원을 은행에 요구불예금으로 예치하였다고 한다. 현재 이 경제의 법정지급준비율은 20%라고 할 때, 예금창조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보기>
ㄱ. A의 예금으로 인해 이 경제의 통화량은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증가할 수 있다.
ㄴ. 시중은행의 초과지급준비율이 낮을수록, A의 예금으로 인해 경제의 통화량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
ㄷ. 전체 통화량 가운데 민간이 현금으로 보유하는 비율이 낮을수록, A의 예금으로 인해 경제의 통화량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
ㄹ. 다른 조건이 일정한 상황에서 법정지급준비율이 25%로 인상되면, 인상 전보다 A의 예금으로 인해 경제의 통화량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예금창조의 크기를 결정하는 법정지급준비율, 초과지급준비율, 민간의 현금보유비율의 방향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예금창조는 은행이 받은 예금 중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부분을 대출하고, 그 대출금이 다시 예금으로 돌아오면서 통화가 반복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이다.
단순한 경우 예금승수는 $1/r$이고, 법정지급준비율이 20%이면 승수는 $1/0.2 = 5$이다.
현실의 통화승수는 $m = \frac{1+c}{r+e+c}$로 볼 수 있으며, 여기서 r은 법정지급준비율, e는 초과지급준비율, c는 민간의 현금보유비율이다.
따라서 r, e, c가 낮을수록 은행 밖으로 새는 자금이 줄어 예금창조와 통화창조가 커진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경제학원론 · 2019 · 2월

선지별 해설

① X
ㄱ, ㄴ은 옳지만 ㄷ이 빠져 있어 정답이 아니다. ㄷ의 핵심은 민간이 현금을 덜 보유할수록 은행으로 돌아오는 자금이 많아져 통화승수가 커진다는 점이다. 올바르게는 ㄱ, ㄴ, ㄷ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② X
ㄴ, ㄷ은 옳지만 ㄱ이 빠져 있고 ㄹ이 포함되어 있어 틀리다. ㄹ의 틀린 표현은 '법정지급준비율이 25%로 인상되면 … 통화량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법정지급준비율이 25%로 오르면 승수가 5에서 4로 낮아져 통화창조가 줄어든다.

③ O
ㄱ, ㄴ, ㄷ만 고른 선택지이므로 맞다. ㄱ은 5천만 원이 예금으로 들어오면 단순 예금승수 5를 적용해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통화창조가 가능하다는 뜻이고, ㄴ과 ㄷ은 각각 초과지급준비율과 현금보유비율이 낮을수록 통화창조가 커진다는 설명이다.

④ X
ㄱ, ㄴ, ㄷ은 옳지만 ㄹ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틀리다. ㄹ은 지준율 인상이 통화창조를 확대한다고 본 점이 반대이다. 올바르게는 다른 조건이 같다면 법정지급준비율 인상은 예금창조와 통화량 증가를 축소시킨다.

오답 포인트

가장 흔한 함정은 지준율과 통화승수의 방향을 거꾸로 보는 점이다. ㄹ처럼 지준율이 높아지면 은행이 더 많이 묶어 두어야 하므로 대출 여력이 줄고, 따라서 통화창조도 줄어든다. 또 ①처럼 옳은 보기 일부만 묶은 선택지를 정답으로 착각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예금창조 문제는 먼저 '누수가 커지는 변수인가, 작아지는 변수인가'를 본다. 법정지급준비율, 초과지급준비율, 현금보유비율은 모두 높아질수록 통화승수를 낮추고, 낮아질수록 통화승수를 높인다. 그다음 각 보기에서 빠진 항목이나 반대 방향 문장을 골라내면 된다.

암기 포인트

지준율↑·초과지준율↑·현금보유비율↑이면 통화승수↓, 반대로 셋이 낮아지면 예금창조↑이다.

NoteBase

문 16. 어떤 경제의 완전고용국민소득이 400조 원이며,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이 경제의 총화폐공급은 현재 30조 원이다. 다음 표는 이 경제의 이자율에 따른 총화폐수요, 총투자, 실질국민소득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 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자율(%)	총화폐수요 (조 원)	총투자 (조 원)	실질국민소득 (조 원)
1	70	120	440
2	60	110	420
3	50	100	400
4	40	80	360
5	30	50	320

① 실질국민소득이 완전고용수준과 같아지려면 중앙은행은 총화폐공급을 20조 원만큼 증가시켜야 한다.

② 현재 이 경제의 실질국민소득은 완전고용수준보다 40조 원만큼 작다.

③ 중앙은행이 총화폐공급을 지금보다 30조 원만큼 증가시키면 균형이자율은 1%가 된다.

④ 현재 이 경제의 균형이자율은 4%이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총화폐공급과 총화폐수요가 일치하는 현재 균형이자율을 먼저 찾은 뒤, 그 이자율에 대응하는 실질국민소득을 완전고용국민소득과 비교하고 목표 소득에 필요한 화폐공급 증가분을 읽는 문제이다.

자료 읽는 순서

1. 현재 총화폐공급 30조 원과 일치하는 총화폐수요를 표에서 찾는다.
2. 그 행의 이자율을 현재 균형이자율로 잡는다.
3. 같은 행의 실질국민소득을 읽어 완전고용국민소득 400조 원과 비교한다.
4. 실질국민소득 400조 원이 되는 행으로 이동해 필요한 화폐공급 증가분을 계산한다.

NoteBase

핵심 근거

현재 총화폐공급이 30조 원이므로 총화폐수요가 30조 원인 이자율 5%에서 화폐시장이 균형이다.
이때 실질국민소득은 320조 원이므로 현재 경제는 완전고용국민소득 400조 원보다 80조 원 낮다.
완전고용국민소득 400조 원은 이자율 3% 행에서 나타나고, 그때 총화폐수요는 50조 원이므로 화폐공급을 20조 원 늘려야 한다.

선지별 해설

1번 O: 실질국민소득 400조 원이 되는 행은 이자율 3%이고, 이때 총화폐수요가 50조 원이다. 현재 총화폐공급 30조 원에서 50조 원으로 늘려야 하므로 20조 원 증가가 맞다.
2번 X: 현재 실질국민소득은 총화폐수요 30조 원과 일치하는 5% 행의 320조 원이다. 완전고용국민소득 400조 원보다 40조 원 작은 것이 아니라 80조 원 작다. 틀린 표현은 "40조 원만큼"이고, 올바르게는 "80조 원만큼"이다.
3번 X: 총화폐공급을 30조 원 늘리면 화폐공급은 60조 원이 된다. 표에서 총화폐수요 60조 원에 대응하는 균형이자율은 2%이다. 틀린 표현은 "1%가 된다"이고, 올바르게는 "2%가 된다"이다.
4번 X: 현재 총화폐공급 30조 원과 일치하는 총화폐수요는 이자율 5%에서 나타난다. 틀린 표현은 "4%"이고, 올바르게는 "5%"이다.

오답 포인트

현재 화폐공급 30조 원을 보고 먼저 5% 행을 찾아야 하는데, 많은 수험생이 완전고용국민소득 400조 원이 있는 3% 행을 현재 균형으로 착각한다. 또 400과 320의 차이를 급하게 읽다가 80조 원을 40조 원으로 잘못 계산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화폐시장 표 문제는 현재 총화폐공급과 같은 총화폐수요를 먼저 찾고, 그 행의 이자율과 소득을 읽는다. 완전고용 여부는 그다음에 목표 소득의 행을 찾아 필요한 화폐공급 증감만 비교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화폐시장 표는 $M^s = M^d$인 행이 현재 균형이고, 목표 소득 행의 화폐수요와 현재 화폐공급의 차이가 필요한 통화량 조정폭이다.

NoteBase

문 17. <보기>에서 임대료 규제의 효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보기>
ㄱ. 암시장의 발생 가능성 증가
ㄴ. 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의 감소
ㄷ. 주택의 질적 수준의 하락
ㄹ. 비가격 방식의 임대방식으로 임대주택의 비효율성 발생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ㄱ, ㄴ, ㄷ, ㄹ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임대료 상한제가 시장균형가격보다 낮게 설정될 때 나타나는 대표적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임대료 규제는 임대료를 균형가격보다 낮게 정하는 가격상한제이다.
가격이 낮게 묶이면 초과수요가 생기므로 가격 대신 다른 방식으로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장기에는 임대사업의 수익성이 낮아져 신규 공급과 유지·보수가 줄어 주택공급과 주택의 질이 함께 떨어질 수 있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경제학원론 · 2019 · 2월

선지별 해설

1번 X
- 1번은 ㄱ만 옳다고 본 선택지이다.
- ㄱ의 암시장 발생 가능성 증가는 맞지만, ㄴ의 장기적 주택공급 감소, ㄷ의 주택 질 저하, ㄹ의 비가격 배분에 따른 비효율성도 모두 맞다.
- 틀린 부분은 ㄴ, ㄷ, ㄹ을 빠뜨린 점이다. 올바르게는 ㄱ, ㄴ, ㄷ, ㄹ이 모두 옳다.

2번 X
- 2번은 ㄱ, ㄴ만 옳다고 본 선택지이다.
- 임대료 규제는 암시장과 공급감소뿐 아니라 유지·보수 유인 약화에 따른 질 저하도 낳을 수 있다.
- 또한 가격 대신 대기시간, 연줄, 사례금 같은 비가격 방식으로 배분되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생길 수 있다.
- 틀린 부분은 ㄷ과 ㄹ을 빠뜨린 점이다. 올바르게는 ㄱ, ㄴ, ㄷ, ㄹ이 모두 옳다.

3번 X
- 3번은 ㄱ, ㄷ만 옳다고 본 선택지이다.
- ㄱ의 암시장 가능성과 ㄷ의 질 저하는 맞지만, 장기 공급 감소와 비가격 배분의 비효율성도 임대료 규제의 전형적 효과이다.
- 틀린 부분은 ㄴ과 ㄹ을 빠뜨린 점이다. 올바르게는 ㄱ, ㄴ, ㄷ, ㄹ이 모두 옳다.

4번 O
- ㄱ은 가격상한으로 초과수요가 생기면 공식 시장 밖 거래가 유인되어 암시장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옳다.
- ㄴ은 장기적으로 임대사업 수익성이 낮아져 신규 주택공급이 줄 수 있으므로 옳다.
- ㄷ은 집주인이 수선·관리 비용을 줄일 유인이 커져 주택의 질적 수준이 하락할 수 있으므로 옳다.
- ㄹ은 가격 대신 줄서기, 연줄, 사례금 같은 비가격 방식으로 배분되어 비효율성이 발생하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임대료 규제의 효과를 단기적인 임대료 억제 하나로만 보면 ㄱ이나 ㄴ까지만 고르기 쉽다. 이 문항의 함정은 장기 공급축소와 품질저하, 그리고 비가격 배분까지 함께 연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가격상한제가 균형가격보다 낮게 설정되면 먼저 초과수요를 떠올린다. 그다음 결과를 암시장, 장기 공급감소, 품질저하, 비가격 배분의 비효율성 순서로 연결하면 판단이 정리된다.

암기 포인트

임대료 상한제는 싸게 보이지만 부족, 암시장, 품질저하, 장기 공급감소를 함께 만든다.

NoteBase

문 18.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사용을 고려한다고 하자. 이와 관련한 서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두 정책의 상대적 효과는 소비와 투자 등 민간지출의 이자율탄력성 크기와 관련이 있다.

② 두 정책이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다.

③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자 한다면 두 정책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④ 두 정책 간의 선택에는 재정적자의 누적이나 인플레이션 중 상대적으로 어느 것이 더 심각한 문제일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경기부양 상황에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산출과 이자율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재정정책은 정부지출 증가나 감세로 총수요를 늘리는 정책이며, 경기부양용 확장재정은 IS를 우측으로 이동시켜 산출을 늘리고 이자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통화정책은 통화량 확대나 금리 인하로 총수요를 늘리는 정책이며, 경기부양용 확장통화는 LM을 우측으로 이동시켜 산출을 늘리고 이자율을 내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두 정책의 상대적 효과는 민간지출, 특히 투자의 이자율 민감도와 화폐수요의 이자율 민감도에 따라 달라진다.

선지별 해설

① O: 맞는 선지이다. 민간지출의 이자율탄력성이 크면 이자율 변화가 투자와 소비를 크게 흔들어 통화정책의 파급효과가 커지고, 재정정책은 구축효과가 커져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 있다.
② X: 틀린 선지는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하다는 표현이다.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재정은 이자율 상승 요인이고 확장통화는 이자율 하락 요인이므로 방향이 서로 반대이다.
③ O: 맞는 선지이다. 산출은 늘리되 이자율 변동은 줄이고 싶으면 확장재정과 확장통화를 함께 써서 재정정책의 금리상승 효과와 통화정책의 금리하락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
④ O: 맞는 선지이다. 재정정책은 재정적자 누적 문제와 더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통화정책은 물가상승 압력과 더 밀접하므로 어떤 부작용을 더 중하게 볼지에 따라 정책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

오답 포인트

많이 틀리는 지점은 경기부양이라는 공통점만 보고 두 정책이 이자율에도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묶어 버리는 점이다. 산출에 대한 방향과 이자율에 대한 방향은 구분해야 하며, 확장재정은 금리 상승, 확장통화는 금리 하락이라는 대비가 핵심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비교하는 문제에서는 먼저 IS와 LM 중 어느 곡선이 움직이는지 본다. 그다음 산출과 이자율의 변화를 따로 판단하면 된다. 경기부양이라는 목적이 같아도 이자율 효과까지 같다고 보면 오답이 된다.

암기 포인트

확장재정은 IS 우측, 금리 상승이고 확장통화는 LM 우측, 금리 하락이다.

NoteBase

문 19. 어떤 마을에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이 총 3개 있다. 오염물 배출에 대한 규제가 도입되기 이전에 각 기업이 배출하는 오염배출량과 그 배출량을 한 단위 감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아래 표와 같다. 정부는 오염배출량을 150단위로 제한하고자 한다. 그래서 각 기업에게 50단위의 오염배출권을 부여하였다. 또한, 이 배출권을 기업들이 자유롭게 판매/구매할 수 있다.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 (단, 오염배출권 한 개당 배출 가능한 오염물의 양은 1단위이다.)

기업	배출량(단위)	배출량 단위당 감축비용(만 원)
A	50	20
B	60	30
C	70	40

① 기업 A가 기업 B와 기업 C에게 오염배출권을 각각 10단위와 20단위 판매하고, 이때 가격은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에 형성된다.

② 기업 A가 기업 C에게 20단위의 오염배출권을 판매하고, 이때 가격은 30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에서 형성된다.

③ 기업 A가 기업 B에게 10단위의 오염배출권을 판매하고, 기업 B는 기업 C에게 20단위의 오염배출권을 판매한다. 이때 가격은 20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에서 형성된다.

④ 기업 B가 기업 C에게 20단위의 오염배출권을 판매하고, 이때 가격은 30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에서 형성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거래가능 배출권 제도에서는 총감축량을 한계감축비용이 가장 낮은 기업이 우선 담당하므로, 비용최소 배분과 균형가격 범위를 함께 판단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규제 전 총배출량은 A 50, B 60, C 70으로 합계 180이다.
정부 목표 총배출량은 150이므로 전체 감축량은 30단위이다.
각 기업의 단위당 감축비용은 A 20만 원, B 30만 원, C 40만 원이고, 배출권은 각자 50단위씩 배분되었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경제학원론 · 2019 · 2월

사용할 공식

거래가능 배출권 시장의 비용최소 조건은 한계감축비용이 가장 낮은 기업이 먼저 감축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단위당 감축비용이 일정하므로 A가 필요한 30단위를 모두 감축하는 것이 총비용을 최소화한다.
균형가격은 A가 판매에 응할 최소 수준인 20만 원보다 높고, B가 감축 대신 구매를 택할 최대 수준인 30만 원보다 낮아 20만 원과 30만 원 사이에서 형성된다.

계산 과정

1. 전체 감축 필요량은 180-150=30단위이다.
2. 감축비용이 가장 낮은 A가 30단위를 감축하면 A의 실제 배출은 20이 된다.
3. A는 배출권 50 중 20만 필요하므로 30단위를 판매할 수 있다.
4. B는 실제 배출 60에 비해 배출권이 10단위 부족하고, C는 실제 배출 70에 비해 20단위 부족하므로 각각 10단위와 20단위를 구매한다.
5. 따라서 효율적 거래는 A가 B와 C에 각각 10단위, 20단위를 판매하는 형태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A가 30단위를 추가 감축해 배출권 30단위를 판매하고, B와 C가 각각 10단위와 20단위를 구매하는 구조가 비용최소 배분이다. 가격은 20만 원보다 높아야 A가 판매하고, 30만 원보다 낮아야 B가 구매하므로 20만 원과 30만 원 사이가 맞다.
② X: A가 C에게만 20단위만 팔면 총감축 30단위 중 나머지 10단위는 B가 감축해야 한다. 더 싼 A 대신 B가 감축하므로 비용최소 배분이 아니다. 또한 가격이 30만 원을 넘으면 B는 구매보다 감축 또는 판매를 택한다. 틀린 표현은 'A가 기업 C에게 20단위의 오염배출권을 판매'와 '가격은 30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이다. 올바르게는 A가 총 30단위를 판매하고 가격은 20만 원과 30만 원 사이에서 형성된다.
③ X: B의 단위당 감축비용은 30만 원이므로 가격이 30만 원보다 낮으면 매수자이고, 높으면 매도자이다. 같은 균형에서 B가 A에게서 10단위를 사면서 다시 C에게 20단위를 파는 구조는 성립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기업 B는 기업 C에게 20단위의 오염배출권을 판매'이다. 올바르게는 B는 10단위를 구매하고 C도 20단위를 구매하며 판매자는 A이다.
④ X: B가 C에게 20단위를 팔려면 자기 배출 60을 30으로 줄여 30단위를 감축해야 한다. 그러나 B의 감축비용 30만 원은 A의 20만 원보다 높으므로 비용최소 거래에서 B가 판매자가 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기업 B가 기업 C에게 20단위의 오염배출권을 판매'와 '가격은 30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이다. 올바르게는 A가 판매자이고 가격은 20만 원과 30만 원 사이이다.

오답 포인트

배출권을 누가 많이 배분받았는지가 아니라 누가 더 낮은 감축비용으로 감축할 수 있는지가 거래 방향을 결정한다는 점이 함정이다. 또한 배출권 시장에는 하나의 균형가격이 형성되므로 같은 기업이 일정한 한계감축비용 아래에서 동시에 매수자이자 매도자가 되기 어렵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배출권 거래 문제는 먼저 총감축 필요량을 구하고, 다음으로 한계감축비용이 낮은 순서대로 누가 감축을 맡는지 정한 뒤, 마지막으로 그 기업의 판매 유인 가격과 다른 기업의 구매 유인 가격 사이에서 균형가격 범위를 잡으면 된다.

암기 포인트

배출권 거래의 비용최소화는 낮은 한계감축비용 기업이 감축하고 높은 한계감축비용 기업이 배출권을 구매하는 구조이다.

NoteBase

문 20. 어떤 사람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소득의 절반을 식료품 구입에 사용한다.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보기>
ㄱ. 식료품의 소득 탄력성의 절댓값은 1보다 작다.
ㄴ. 식료품의 소득 탄력성의 절댓값은 1이다.
ㄷ. 식료품의 가격 탄력성의 절댓값은 1보다 크다.
ㄹ. 식료품의 가격 탄력성의 절댓값은 1이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식료품 지출비중이 항상 1/2로 일정할 때 수요함수의 형태와 소득탄력성·가격탄력성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식료품 지출이 항상 소득의 절반이면 식료품 지출액은 $E = 0.5Y$이다.
식료품 가격을 P, 수요량을 Q라 하면 $PQ = 0.5Y$이므로 $Q = 0.5Y/P$가 된다.
따라서 Q는 소득 Y에 비례하므로 소득탄력성은 1이고, 가격 P에 반비례하므로 가격탄력성의 절댓값도 1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①은 ㄱ, ㄷ의 조합이다.
ㄱ의 "소득 탄력성의 절댓값은 1보다 작다"는 부분이 틀리다. 올바르게는 소득탄력성은 1이다.
ㄷ의 "가격 탄력성의 절댓값은 1보다 크다"는 부분도 틀리다. 올바르게는 가격탄력성의 절댓값은 1이다.
따라서 ①은 옳은 조합이 아니다.

② X
②는 ㄱ, ㄹ의 조합이다.
ㄹ은 맞지만 ㄱ이 틀리므로 ②는 오답이다.
틀린 표현은 ㄱ의 "1보다 작다"이고, 올바르게는 "1이다"이다.

③ X
③은 ㄴ, ㄷ의 조합이다.
ㄴ은 맞지만 ㄷ이 틀리므로 ③은 오답이다.
틀린 표현은 ㄷ의 "1보다 크다"이고, 올바르게는 "1이다"이다.

④ O
④는 ㄴ, ㄹ의 조합이다.
ㄴ은 수요량이 소득에 정확히 비례하므로 맞다.
ㄹ은 수요량이 가격에 정확히 반비례하므로 가격탄력성의 절댓값이 1이어서 맞다.

오답 포인트

지출비중이 일정하다는 문장을 보고 소득이 늘어도 소비 비중이 안 변하니 탄력성이 1보다 작다고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비중이 일정하다는 것은 지출액이 소득과 같은 비율로 함께 증가한다는 뜻이므로 수요량도 소득에 비례한다. 또 $Q = 0.5Y/P$에서 가격이 분모에 있으므로 가격탄력성도 단위탄력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소비지출의 일정 비율이 어떤 재화에 쓰인다고 나오면 먼저 PQ=일정 비율× Y로 둔다. 그다음 Q를 Y와 P로 풀어 비례하면 해당 탄력성은 1, 반비례하면 가격탄력성의 절댓값은 1이라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지출비중 일정이면 Q=비율× Y/P, 소득탄력성 1, 가격탄력성 절댓값 1이다.

NoteBase